Ⅲ. 일본 (FY2011: 2011. 4~2012. 3)

□ FY 2011: 2011. 4 ~ 2012. 3

□ 2011회계연도 예산편성 일지

- 2010. 7. 27 FY2011예산 편성의 기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 2010. 9. 1 FY2011 각부처의 예산요구 금액
- 2010. 9. 2 FY2011 각부처의 예산요구서 및 정책평가 조서 공개
- 2010. 12. 24 FY2011예산 정부안 결정
- 2011. 1. 24 FY2011예산 정부안 국회 제출
- 2011. 1. 24 FY2011예산 정부안 국회 심의 개시

□ 출처:

- 概算要求組替え基準閣議決定(2010. 7. 27)
- 平成23年度一般會計概算要求額等(2010. 9. 1)
- 各府省の概算要求書・要望及び政策評価調書公開ページへのリンク先一覽(2010. 9. 2)
- 經濟見通しと經濟財政運營の基本的態度(2010. 12. 22)
- 平成23年度予算政府案(2010. 12. 24)
- 平成 23年度厚生労働省予算案の主要事項(2010. 12. 24)
- OECD Economic Outlook 88(2010. 11)

□ 환율: 100엔 = 약 1,320.56원(2010년도 평균)

□ 경제규모: 2009년 경상GDP 5조 681억달러(우리나라 6.1배 수준)

□ 수출입의 대 GDP 비율(명목): 2009년 기준 22.3%(우리나라 107.0%)

□ 인구: 1억 2,700만명(2010년 기준)

— <요 약> —

◇ 경제 및 재정전망

- 만성적인 저성장에 시달려 왔던 일본 경제는 2011년도에도 디플레이션과 엔화 강세, 재정 악화 등 만만치 않은 경제 불안요소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1%대의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계속되는 위기대응 및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2011년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약 7.1%를 기록할 전망

◇ 예산기조: 2011년 예산은 2010년 발표된 「신성장전략」의 지속적인 추진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구성의 기준 및 틀을 발표

◇ 예산안 내용

- FY2011 조세 및 인지수입은 전년대비 9.4% 증가하여 40조 9,270억엔으로 예상
- FY2011 세출 중 국채비를 제외한 약 71조엔은 사회보장비의 자연 증가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신성장전략 시책 등에 중점을 두고 사용

◇ 주요 재정정책

- 경제위기 대응 조치
 - 1단계: 「신성장전략 실현을 위한 3단계 경제대책」을 발표(2010. 9. 9)
 - 2단계: 「엔고·디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급종합대책」 발표(2010. 10. 8)
 - 3단계: 국제적 수준을 목표로 한 법인세 개혁(2010. 12. 16)
- 재정건전화
 - 재원확보 원칙(PAYGO 원칙), 재정적자 감축 원칙 등 5가지 기본원칙을 따르는 「중기재정운영전략」에 근거하여 매년 예산편성하고 있음
- 복지지출 관리 정책
 - 복지감축 정책을 통해 재정건전화에 노력하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위기 후에도 일본의 사회보장 관련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사회보장 관련 비용 중 특히, 자녀수당 확대를 중점으로 복지부문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약 6,693억엔(13.2%) 정도 크게 증가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09. 1. 16	「경제재정의 중장기 방침과 10년 전망」 발표	재정동향 1호
2009. 4. 27	「긴급경제대책」을 위한 FY2009 1차 추경안 발표	재정동향 1호,2호
2009. 6. 23	「경제 재정개혁의 기본방침 2009」 발표	재정동향 1호
2009. 7. 31	FY2008 결산 발표	
2009. 8. 30	민주당의 54년만의 정권교체 성공	
2009. 12. 15	「긴급경제대책」을 위한 FY2009 2차 추경안 발표	
2009. 12. 25	FY2010 예산안 발표	
2009. 12. 25	공정·투명·설득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	재정동향 2호
2009. 12. 30	「신성장전략」 기본방침 발표	
2010. 1. 15	「긴급경제대책」에 따른 주택에코포인트제 실시	
2010. 6. 3	「산업구조비전 2010」 발표	재정동향 3호
2010. 6. 18	「신성장전략」 발표	
2010. 6. 22	「재정운영전략」 발표	
2010. 6. 29	FY2010 결산 발표	
2010. 7. 27	FY2011 개선요구의 기준 및 틀 발표	재정동향 4호
2010. 9. 9	「신성장전략 실현을 위한 3단계 경제대책」을 발표	
2010. 10. 8	「엔고·디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급종합대책」 발표	
2010. 10. 8	「엔고·디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급종합대책」을 위한 추경 예산 발표	
2010. 10. 26	FY2010 1차 추경안 발표	재정동향 5호
2010. 12. 16	「국제적 수준을 목표로 한 법인세 개혁안」 발표	
2010. 12. 24	FY2011 예산안 발표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만성적인 저성장에 시달려 왔던 일본 경제는 2011년도에도 디플레이션과 엔화 강세, 재정 악화 등 만만치 않은 경제 불안요소들이 존재
 - 2010년도 회복세를 보이던 일본경제는 수출 및 내수가 모두 부진을 보이고 이로 인한 투자 감소 및 고용지표 악화, 재고증가 등의 이유로 일본 경제가 2010년 하반기부터 다시 둔화세로 돌아섬

- 더불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경제가 2010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도 2011년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2011. 1)
 - 일본 중앙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 둔화추세를 고려하여 2011년도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2.0%에서 소폭 하락한 1.8%대로 전망
 - 국제통화기금(IMF)은 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7%로 전망
 - 민간회사 중 도쿄미쓰비시은행 1.0%, 미즈호은행 1.3%, 노무라증권 1.2%로 대부분 1% 초반대의 낮은 성장률을 전망

- 일본 노무라증권은 2010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엔화강세와 함께 중국의 긴축정책이 계속된다면 일본 수출·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경기를 더욱 냉각시킬 수 있다고 지적
 - 엔고로 인한 환율 변동은 보통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1년 상반기까지 경상수지 둔화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

- 하지만, 중국과 아시아 신흥국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일본경제는 완만하지만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존재

- 일본 재계단체인 경제단체연합회(케이단렌)는 2011년도 상반기는 경제가 다소 어려울 전망이지만 하반기부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 분석
- 일본상공회의소도 이르면 4월 이후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 언급

<표 III-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전년대비, %, 조엔)

구 분	2009	2010	2011	전년대비 증가율		
	실적	추정	전망	2009	2010	2011
국내총생산	474.0	479.2	483.8	△ 3.7	1.1	1.0
민간최종소비지출	280.7	281.7	282.2	△ 2.3	0.4	0.2
민간주택투자	12.9	13.0	13.8	△ 21.3	0.7	5.8
민간설비투자	63.7	66.4	69.2	△ 16.6	4.2	4.2
재화·서비스 수출	△ 3.6	△ 3.2	△ 2.5	△ 0.9	0.1	0.1
재화·서비스 수입	64.2	73.4	77.3	△ 18.0	14.3	5.2
(공제)재화서비스 수입	60.2	68.3	71.4	△ 25.0	13.5	4.6
내수기여도				△ 4.9	0.8	0.8
민간				△ 5.5	0.9	1.0
공공				0.6	0.0	△ 0.2
외수기여도				1.2	0.2	0.2
노동 및 고용						
취업자수	만명			%		
고용자수	6,608	6,588	6,593	△ 0.6	△ 0.3	0.1
실업률	6,265	6,258	6,285	△ 1.7	△ 0.1	0.4
생산	5,457	5,466	5,503	△ 1.1	0.2	0.7
광공업생산지수	%					
	△ 8.9	8.6	2.5			
물가				%		
생산자물가지수	△ 5.2	0.3	0.4			
소비자물가지수	△ 1.7	△ 0.6	0.0			
GDP 디플레이터	△ 1.3	△ 2	△ 0.5			
국제수지				조엔		
수출	55.6	64.3	68.3	△ 17.9	15.8	6.2
수입	49.0	56.5	59.9	△ 26.4	15.4	6.1
경상수지(조엔)	15.8	16.4	17.6	3.3	3.4	3.6

자료: 내각부, 「經濟見通しと經濟財政運營の基本的態度」, 2010. 12. 22

나. 재정전망

- 2011년도 GDP 대비 재정적자는 계속되는 위기대응 및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약 7.1%를 기록할 전망
- 2010년도 재정적자는 8.1%에 비해 추정되는 다소 개선된 수치이지만 위기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높은 수치
 - 사회보장 관련 비용을 포함할 경우 재정적자 비율은 7.1%에서 8.2%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2011년도 GDP 대비 국채비율은 지난해보다 5.6% 증가한 204.2%로 예상
 - 2011년도 채권잔액은 2010년 대비 약 26조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GDP 대비 비율은 138%로 예측됨
 - 국가 및 지방 장기채무는 지난해보다 약 23조엔 증가한 184조엔(GDP 대비 184%)으로 예측됨
 - 국채 의존도는 2010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인 47.9%로 전망

<표 III-2> 주요 재정지표 추이

(단위: GDP 대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실적			추정	전망
재정수지 ¹⁾	△2.8	△3.4	△8.3	△8.1	△7.1
재정수지 ²⁾	△3.0	△3.8	△8.9	△8.8	△8.2
국채 비율	167.1	173.9	192.8	198.4	204.2
채권잔액 비율	-	110(546조)	125(594조)	134(642조)	138(668조)
국가 및 지방 장기채무 비율	-	156(770조)	173(819조)	181(868조)	184(891조)
국채의존도 ³⁾	31.0	39.2	37.6	48.0	47.9

주: 1) OECD Economic Outlook 88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수치

2) OECD Economic Outlook 88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수치

3) 국채의존도 = 국채발행액/총재정지출

자료: 재무성, 「平成23年度予算政府案」, 2010. 12. 24

2. 예산기조

- 2011년 ‘건강한 일본 부활’을 위한 개산요구의 4가지 기준 및 틀을 발표 (2010. 9. 2)
 - 2011년도 예산은 정권 교체 후 최초의 본격적인 편성이며 지난 6월 발표된 「신성장전략」의 지속적인 추진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두고 구성
 - i) 각 부처는 디플레이션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사업, 고용확대에 이바지하는 사업, 인재육성 및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요구해야 함
 - ii) 낭비를 근절하도록 총예산 편성
 - 각 부처는 예산을 요구하기에 앞서 사업구분 및 행정사업 평가의 결과 반영, 20년 이상 경과한 사업의 경우, 폐지를 전제로 검증, 독립행정법인과 공익법인에 대한 보조금 삭감 및 부처 시설비용 삭감 등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
 - iii) 2010. 6. 22 발표한 「재정운영전략」에 따라 세출대상 경비가 약 71조엔임을 인식하고 국채발행액도 2010년도 당초 예산의 발행액(약 44조엔)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재정건전
 - iv) 각 부처 간의 예산 조정 및 배분에 관련된 자료 및 예산요구 과정에 대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예산편성 전반에 투명성 강화 추진

- 2011년 예산은 ‘성장과 고용’을 가장 큰 목표로 하여, 향후 수요확대 분야를 중점으로 고용을 늘리고 경기회복과 디플레이션 탈출을 통해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편성
 - 2011년 예산은 중기 재정운영 전략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0년 당초예산 수준인 기초 재정수지 경비 71조엔, 신규채권발행액 44조엔을 넘지 않도록 함

3. 예산안 내용

<표 III-3> FY2011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단위: 억엔, %)

구 분	FY2010 추정(A)	FY2011 전망(B)	비교증감액 (B-A)	증감율(%)
세 입				
조세 및 인지수입	373,960	409,270	35,310	9.4
기타 수입	106,002	71,866	△ 34,136	△ 32.2
국채발행	443,030	442,980	△ 50	△ 0.0
계	922,992	924,116	1,124	0.1
세 출				
국채비	206,491	215,491	9,000	4.4
기초재정수지 경비	709,319	708,625	△ 694	△ 0.1
결산 적자보전	7,182	-	△ 7,182	-
계	922,992	924,116	1,124	0.1

자료: 재무성, 「平成23年度予算政府案」, 2010. 12. 24

가. 세입

- FY2011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1,124억엔(0.1%) 증가한 92조 4,116억엔 수준으로 사실상 지난해와 거의 동일
 - 조세 및 인지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9.4% 증가하여 40조 9,270억엔으로 예상
 - 전년대비 6.9% 증가한 소득세와 30.9% 증가한 법인세가 세입증가분의 76.7%, 대부분을 차지
 - 항공기연료세와 톨세가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다른 세입 증가분이 이를 상쇄함
 - 반면 기타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3조 4,136억엔(32.2%) 가량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국채 발행액은 44조 2,980억엔 수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거의 변동 없음

<표 III-4> FY2010 조세 및 인지수입

(단위: 억엔, %)

세 목 (일반회계)	FY2010		FY2011	전년대비			
	예산(당초)	추경	예산안	예산(당초)		추경	
	(A)	(B)	(C)	(C-A)	증감률	(C-B)	증감률
원천소득세	101,540	104,910	111,720	10,180	10.0	6,810	6.5
신고소득세	24,600	23,170	23,180	△1420	△5.8	10	0.0
(소득세 계)	(126,140)	(128,020)	(134,900)	(8,760)	(6.9)	(6,820)	(5.4)
법인세	59,530	74,890	77,920	18,390	30.9	3,030	4.0
상속세	12,710	12,710	14,230	1,520	12.0	1,520	12.0
소비세	96,380	101,550	101,990	5,610	5.8	440	0.4
주 세	13,830	13,830	13,480	△350	△2.5	△350	△2.5
담배세	8,270	8,270	8,160	△110	△1.3	△110	△1.3
휘발유세	25,760	25,760	26,340	580	2.3	580	2.3
석유가스세	120	120	120	0	0.0	0	0.0
항공기연료세	770	770	460	△310	△40.3	△310	△40.3
석유석탄세	4,800	4,800	5,120	320	6.7	320	6.7
전원개발촉진세	3,300	3,300	3,460	160	4.8	160	4.8
자동차증량세	4,470	4,470	4,280	△190	△4.3	△190	△4.3
관 세	7,560	7,560	8,150	590	7.8	590	7.8
톤 세 ¹⁾	50	80	30	10	△40.0	10	△62.5
인지수입	10,240	10,240	10,570	330	3.2	330	3.2
합계	373,960	396,430	409,270	35,310	9.4	12,840	3.2

주: 1) 외국의 무역선이 입항할 때 배의 톤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자료: 재무성, 「平成 23年度一般會計歳入歳出概算」, 2010. 12. 24

나. 세출

- FY2011 세출 중 국채비를 제외한 약 71조엔을 사회보장비의 자연증가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신성장전략 시책 등에 중점을 두고 사용
 - 분야별로는 사회보장관계비가 2010년 대비 1조 4,393억엔(5.3%) 증가한 28조 7,709억엔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복지 관련 비용을 감축하려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재정건전화를 위해 대부분 분야의 FY2011 세출은 2010년에 비해 감소할 전망

<표 III-5> FY2011 일반회계 분야별 일반세출 내역

(단위: 억엔, %)

구 분	FY2010 당초(A)	FY2011 전망(B)	비교증감액 (B-A)	증감률 (%)
사회보장관계비	272,686	287,079	14,393	5.3
문교 및 과학진흥비	55,872	55,100	△ 772	△1.4
국채비	206,491	215,491	9,000	4.4
연금관계비	7,144	6,434	△ 710	△9.9
지방교부세금교부금	174,777	167,845	△ 6,932	△4.0
방위관계비	47,903	47,752	△ 151	△0.3
공공사업관계비	57,731	49,743	△ 7,987	△13.8
경제협력비	5,822	5,298	△ 524	△9.0
중소기업 산업대책비	1,911	1,969	58	3.0
에너지대책비	8,420	8,559	139	1.7
식료안정공급관계비	11,612	11,587	△25	△0.2
기타경비	51,943	55,660	3,717	7.2
경제긴급대응 예비비	10,000	8,100	△ 1,900	△19.0
예비비	3,500	3,500	-	-
계	915,810	924,116	8,306	0.9
결산부족분	7,182	-	△ 7,182	-
합계	922,992	924,116	1,124	0.1

자료: 재무성, 「平成 23年度一般會計歳入歳出概算」, 2010. 12. 24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제위기 대응 및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1) 1단계: 「신성장전략 실현을 위한 3단계 경제대책」을 발표(2010. 9. 9)

- 급속한 엔고 및 디플레이션 상황에 대응하여 즉각적인 고용 대책에 중점을 두고, 2010년도 경제위기 대응 지역활성화 예비비(9,179억엔)를 활용한 긴급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 저탄소형 산업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판로 개척 지원, 신입사원 지원대책을 통한 고용기반 강화, 가전 및 주택 에코 포인트 제도 연장을 통한 소비기반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2) 2단계: 「엔고·디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급종합대책」 발표(2010. 10. 8)

- 1단계에 이어 경기 및 고용동향을 근거로 필요한 경우, 추경예산 편성 등 기동적으로 탄력적인 대응을 실시하는 방안인 「엔고·디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급종합대책」은 급속한 엔고의 진행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고 경기의 자율적인 회복을 위한 2011년의 정책방향을 포함
 - 2011년도 “건강한 일본, 부활 특별 경제”를 위한 시책사업을 1) 인재육성 및 고용, 2) 신성장 전략의 추진 가속, 3) 육아·의료·개호·복지 강화, 4) 지역활성화·사회자본 정비·중소기업 대책, 5) 규제·제도 개혁이라는 5가지 큰 틀을 바탕으로 추진
 - (고용) 젊은층을 중심으로 신입사원 취업지원,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에 대한 지원 등 성장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재육성을 도모함
 - (성장) 환경에너지, 생명혁신 등 성장분야의 기반을 정비하여 성장의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국민에게 환원되도록 추진

- (복지)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그 잠재수요의 실현을 고용확대로 연결
- (지역)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 정비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지역 활성화 도모
- (규제) 재원을 절감하고 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

3) 3단계: 국제적 수준을 목표로 한 법인세 개혁 (2010. 12. 16)

□ 법인세율의 국제적인 수준 실현을 목표로, 우선 내년에 5%p 인하

- 현행 40.7%에서 35.6%로 개정
-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 수준의 투자 사업 환경으로 정비하기 위한 첫걸음
- 이는 기업의 해외 유출 방지와 국내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중소기업 경감세율 3%p 할인

- 연간 800만엔 이하 기업에 대해 현행 18%(원칙적으로는 22%)에서 15%로 세율 인하
-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고용촉진 기대

나. 재정건전화

<참고> 2009~2010년 일본 정부가 수행한 재정건전화 조치

날짜	주요 내용	출처
2009. 1.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방침 2006」에 의한 5개년 세출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최 대한의 지출삭감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서의 예산요구에 있어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후평가제 도 강화 - 세입개혁을 위한 「중기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보 장 구축과 이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상황이 호전될 경우, 소비세율 인상 등 근본적 세제개혁 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보장 재원을 마련, 지속가능한 사회보 장제도를 구축 • 중장기적으로 세입개혁을 지속 추진하여 2010년대 중반까지 국가채무비율 안정 및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목표 	재정동향 1호
2009. 1.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략실에 ‘중기재정 운영에 관한 검토회’ 신설: 향후 3년간 국가 재정의 기본구조 마련(‘중기재정구조’) 및 중장기적 재정 건전화 방향(‘재정운영전략’)을 마련하기 위함 	재정동향 2호
2009. 6.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방침 2009」 및 「중기 프로그램」의 일부개정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방침 2009에서는 FY2010 예산과 관련하여 「기본방침 2006」을 바탕으로 세출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동시에 사회보장 제도의 강화 • 「중기 프로그램」에 사회보장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재원 확보 내용과 함께 검토 내용 추가 	재정동향 1호
2010. 6~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세를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안 제시되었으나 인 준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소비세는 기초연금, 노인 의료, 노인 요양 등 3개 분야에 투입하고 있으나, 매년 사회보장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비 세 인상의 필요성 제기 • IMF도 일본이 막대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를 타개하기 위해 서 점진적인 소비세 인상 촉구 	재정동향 3호
2010. 6.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건전화 목표 및 방안을 담은 ‘중기 재정운영전략’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건전화 목표: 2011년부터 3년 동안 세출 및 국채발행을 적극적으로 억제하여 2015년도까지 GDP 대비 적자폭을 2010 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늦어도 2020년까지 흑자전환을 목표로 함 • 재정건전화 방안: PAYGO, 국채 발행액 억제, 의무지출에 대 한 재원확보 원칙, 세출 재검토의 원칙,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 원칙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동향』 제1~4호 참조

□ 일본은 매년 「중기재정운영전략」(2010. 6)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

○ 중기재정운영 전략은 다음의 5가지 기본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음

- 재원확보 원칙(「PAYGO 원칙」)
- 재정적자 감축 원칙(국채발행액 감축)
- 사회보장 등 의무지출에 대한 안정적 재원확보 원칙
- 세출 재검토의 원칙
-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 원칙

□ 중기재정전략의 발표

○ 2011년 하반기 무렵, 당면한 경제전망이나 중장기 경제·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중기재정전략 개정을 실시하여 2012~2014년(헤세이24~26년)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중기재정전략을 설정할 예정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 2011년도 후생노동성 예산 중 사회보장 관련 비용이 98.5%로 대부분을 차지함

○ 2011년 사회보장 관련 비용은 2010년 대비 1조 4,360억엔(5.3%) 증가한 28조 5,153억엔 수준

○ 사회보장 관련 예산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도 31.9% 증가하여 위기 이후 복지감축 정책을 통해 재정건전화에 노력하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위기 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표 III-6> 연도별 후생노동성 예산

(단위: 억엔, %)

	2008	2009	2010	2011	2011 증가분
일반회계	221,223 (3.0%)	251,568 (13.7%)	275,561 (9.5%)	289,638 (5.1%)	14,077
-사회보장관련비용	216,136 (3.1%)	246,522 (14.1%)	270,793 (9.8%)	285,153 (5.3%)	14,360
-과학기술진흥비용	1,135 (1.5%)	1,145 (0.9%)	1,125 (△1.7%)	1,090 (△3.1%)	△35
-기타비용	3,951 (△1.0%)	3,901 (△1.3%)	3,643 (△6.6%)	3,396 (△6.8%)	△247

주: 2008, 2009, 2010년 예산은 당초 예산
 자료: 후생노동성, 각년도 「厚生労働省所管予算案關係」

- ① (의료) 사회보장 예산 중 의료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1년에는 9조 9,250 억엔이 편성됨
 - 의사 등 인력 확보 대책, 의료 체제 정비, 혁신적인 의약품 및 의료 기기 개발 촉진 등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예산편성
 - 의료비의 국고부담, 지역의료 확보책, 응급의료 체제 구축 지원 등에 예산이 주로 편성되어 있음

- ② (연금) 연금관련 2011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2,493억엔(2.5%) 증가한 10조 3,847억엔 수준임
 - 2008년에서 2009년에 크게 증가(32.7%)한 후로 2%내외로 증가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구축을 위해 기초연금 국고부담율 1/2 유지하고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을 진행
 - 연금 국고부담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10조 3,755억엔 수준

<표 III-7> 연도별 사회보장비 관련 예산

(단위: 억엔, %)

	2008	2009	2010	2011	2011 증가분
사회보장 관련 비용	216,136 (3.1%)	246,522 (14.1%)	270,793 (9.8%)	285,153 (5.3%)	14,360
-연금	74,382 (5.8%)	98,702 (32.7%)	101,354 (2.7%)	103,847 (2.5%)	2,493
-의료	85,644 (1.6%)	90,252 (5.4%)	94,594 (4.8%)	99,250 (4.9%)	4,655
-간호	19,062 (△2.2%)	19,699 (3.3%)	20,803 (5.6%)	22,037 (5.9%)	1,233
-복지	35,092 (5.2%)	35,937 (2.4%)	50,780 (41.3%)	57,473 (13.2%)	6,693
-고용	1,957 (△11.6%)	1,931 (△1.3%)	3,262 (68.9%)	2,547 (△21.9%)	△715

주: 2008, 2009, 2010년 예산은 당초 예산
 자료: 후생노동성, 각년도 「厚生労働省所管予算案關係」

③ (기타) 기타 복지 관련 예산은 증가하였고, 고용관련 예산은 감소

- (복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2010년 신설된 자녀수당 확대를 중점으로 하여 양육지원 금액 인상
 - 2010년 1조 4,722억엔이었던 자녀수당에 소요되는 예산은 2011년에 크게 증가 (36.4%)하여 2조 77억엔 수준
 - 이외에도 방과 후 아동 지원대책, 한부모 자녀 관련 지원대책 등 보육관련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
- (고용) 고용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했던 2010년에 비해 2011년 고용예산은 24.7% 감소한 2,547억엔 편성
 - 세계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면서 해고·신입사원의 입사 취소 등 고용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고용시장 확대를 위해 ‘긴급고용대책’ 등을 시행, 노동자의 고용유지, 재취업 지원, 지역 고용대책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2010년도 고용 관련 예산이 급증

- 2011년에는 2010년에 비해 개호 복지, 의료 등의 분야에서 고용창출 및 직업훈련 지원, 정규직으로 전환을 돕기 위한 작업카드제도 등에서 예산을 줄임

□ 한편, 연초 니혼게이지신문은 올해 정부가 노인복지 사업에 투입할 예산이 9조 9천억엔 부족하다고 보도 (2011. 1. 4)

- 일본은 노인 복지 예산을 현재 소비세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어 해마다 자연 증가 비용이 커지는 상황
- 이같은 예산 부족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정부가 전면적인 세금 개혁을 연기해온 결과라는 비판과 함께, 소비세율을 현재 5%에서 12%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민주당이 2009년 선거 때 제시한 복지 관련 공약 중 선거 이후, 자녀수당은 2010년에 시행되고 있고 이외 몇몇 정책들도 관련 예산을 편성 받음

- 자녀수당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든 아동에게 월 2만 6천엔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복지 관련 예산 중 큰 부분을 차지
- 한부모 가정의 자립 지원 정책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지금까지 지급대상이 아닌 부자 가정에도 자녀 부양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공약은 시행되어 2010년에 50억엔 예산이 편성
- 연금개혁 공약을 살펴보면 연금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기록문제의 집중 대응기간을 2011년까지로 설정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연금기록을 인터넷 상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연금제도 개혁 검토 팀을 창설하는데 예산을 편성
-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1,000엔으로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와 관련되어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검토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

<표 III-8> 민주당의 복지 관련 정책 시행 여부

(단위: 억엔)

정책	내용	시행 여부 및 관련 예산 ¹⁾		
		2010	2011	
2010년 부터 실시	자녀 수당	중학교 졸업까지 자녀 1인당 월 26,000엔(2010년은 반액) 지급, 전액 지급에 맞추어 배우자 공제, 부양공제는 폐지	1조 4,722 (시행)	2조 77
	고교 수업료	공립고교는 무상, 사립고교도 상당액 지급	-	-
4 년 후 까 지 실 시	소비세 ²⁾	세율 인상은 4년간 동결	간 총리는 신년맞이 기자회견에서 소비세 인상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	
	연금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같은 제도에 가입. 전직을 해도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짐	연금기록을 인터넷 상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40	27
			연금제도 개혁 검토 팀을 창설	
		월 7만엔의 최저보장 연금 창설	-	-
	의료· 돌봄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를 폐지하고, 현역세대와 같은 제도에 가입	-	-
돌봄 노동자의 임금을 월 4만엔 인상		-	-	
고용 대책	제조현장으로의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새로운 전문직 제도를 도입	-	-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전국 최저임금(시급 800엔)을 설정. 전국 평균 시급을 1,000엔을 목표로 함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검토: 1억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50억엔	

주: 1) 신규로 시행되는 정책의 예산만 정리

2) 일본은 노인 복지 예산을 현재 소비세에서 충당하고 있음

자료: 재정포럼 「일본 민주당 정권의 경제개혁」, 원중학, (2009. 11월호) 참고

平成22年度厚生労働省所管予算案關係, 후생노동성